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vs '의회 의결' 해법 찾나

6월 地選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 '촉각'

속도론자 "의회 동의로 갈음해야 가능"

신중론자 "주민투표 통해 숙의 거쳐야"

姜시장 "중요한 문제...의견 수렴할 것"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여부를 결정지을 통합 절차와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절차를 의회 의결로만 마무리할 경우 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 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시간이 축복한 만큼 6월 선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통합 일정과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의견과 지역 특례 요구가 함께 반영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정치, 통합 청사 문제 등 세부 사항은 법안 단계에서 일부러 비워두고 광주·전남이 참여하는 시·도 협의체에서 합의해 채워 넣는 구조다.

시·도 협의체는 8·18 구성으로 세부 특례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심사에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절차 선택이다. 시·도의회 등의

만으로 통합을 확정할 경우 법적·행정적 절차상

으로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 가능하다는 분

석이 나온다.

실제 통합 시점을 7월로 상정한 법안 구조상

통합 청사 위치나 조직 세부 설계는 출범 이후로 미뤄도 무방하다는 논리다.

통합 광역단체장만 먼저 선출하고 의회 역시 기존 시·도의원 정족수를 유지한 채 통합 의장은 선출하면 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를 태할 경우 일정은 크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행정통합은 양 시·도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정준호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투표 수 과반일 것 같다"며 "(일정표상) 주민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면 6월 통합 광역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위한 속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민투표가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2월 특별법 통과와 6월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이 행정적인 절차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면 시·도민 여론과 동떨어진 급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얼마나 무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회 동의 방식으로 일단은 (통합을) 추진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별도의 시·도민 여론 수렴을 병행하는 방안을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1호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 있는 만큼 오는 9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일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행정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충분

한 숙의 과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신중한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오는 9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정치권의 오찬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 간 '의회 동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후 일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 동의로만 갈 건지, 주민투표까지 거칠 것인지는) 진짜 의논을 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주민투표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강 시장은 "(지방 자치법상)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의회 의견을 도대로 결정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시기적으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 문제는 중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2월 특별법 제정...의견 수렴 통합안 도출"

김영록지사 행정통합 담화문

"필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

통합 최적기 머뭇거릴 시간 없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7월을 목표로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본격적인 대향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에 앞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과거에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지원과 조력을 약속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는 통합정부에 서둘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 스스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통합은 곧 경제이고 일자리"라며 "명실상부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서 REI100 국가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대규모 반도체 산업까지 유치해 AI·에너지 수도 광주·전남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멋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광주·전남 대부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우선한다. 우리의 강점을 살릴 농협·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같은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통합이 곧 균형발전"이라며 "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추가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을 확실하게 실현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라며 "일각에서는 7월 출범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만 순풍을 만난 배는 하루에 천 리도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양 시·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통합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로드맵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1급 체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밀려서 통합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체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이 국가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점하게 된다"고 신속한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 바로 통합의 최적기"라며 "호남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 그 길이 바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고 역설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2026년 시무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市·道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도 조속 구성

광주시, 특별법안 마련 총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첫 실무회의에서는 행

정통합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 방향, 관계기관 협의 절차, 준비 과정,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구성해 운영하는 민·관 합동기구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양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성과 명확한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세부 구성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족할 계획이다. 이어 키포 회의 개최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충분한 준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트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트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율: 158.9%)

※ 광주·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무사고 운전 방법

안전거리 확보하기

*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전방주시 유지하기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금고 주행과 동일

안전벨트 착용하기

광주·전남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 안전벨트 미착용